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첨단산업입지/Utility조사를 다녀와서

유재열서기관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9월 초에 열흘간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첨단산업입지 및 Utility 현황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혼자서만 알고있기에는 아쉬워서 통상산업가족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입지 및 UTILITY』 용역의 일환으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로 하여, 미국, 일본, 대만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1. 들어가기

먼저 96년 180억불 수출로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한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알아보자.

반도체는 집적도가 2년마다 4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3~4년이다. 투자 결정시점 이후 1~2년 이내의 단기간에 상품이 출하되어야 승부를 걸 수 있다.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의 컨셉으로 접근은 곤란한데도 우리 정부의

반도체 산업을 위한 용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는 일본식 외래어임) 지원이 원활히 되지않아 기업의 애로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는 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정책을 함께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첨단산업유치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미흡한가를 보여주고 싶어했다.

우리 일행은 10명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에서는 LG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전자, 반도체협회, 우리부는 나하고 관련 부서 사무관으로 구성되었다.

2. 텍사스에 SAS(Samsung Austin Semiconductor)의 깃발을 꽂고

미국은 텍사스오스틴의 삼성전자 및 주정부를 방문하고 그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산호세의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오스틴의 상공회의소와

시청 그리고 삼성오스틴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였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왜 미국으로 진출하였는가?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현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중 사업하기가 어디가 나은가? 이성환사장은 그래도 한국이 낫단다. 미국으로의 진출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덤핑문제 해소, 신경영기법의 체득 등을 위해 진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다.

미국은 엄격한 법 집행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힘들단다. 예를 들면 기업이 환경오염을 시키면 미국에서는 그 기업은 끝장이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융통성(?)이 있다. 인력관리면에서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쉽다.

언어, 풍습이 다른 외국인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하는 것이 쉽다. 기타 외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문화적 Shock가 큰가? 삼성

오스틴반도체의 이성환 한국인사장은 해외진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반덤핑관세 부과 등 통상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해외경영에서 선진 경영, 생산의 Know-How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고국 기업의 세계화에 활용하고자 한다.

고국의 산업공동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뗏뗏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스틴은 Work Spirit가 강한 도시로서 노동의 권리와 노동운동의 권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일할 권리를 더 존중하는 풍토란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설립 자체는 조합의 자유라는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공장으로 향하는 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두 길중에서 한 쪽은 노동조합이 출입하는 길, 나머지 한 쪽은 비 노동조합원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노동조합용 길을 연장하여 뒷출입문으로 통하게 하여 비 노동조합원의 출입자체를 다르게 하여 상호마찰을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것이란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지에서 채용한 미국인이 제안해서 채택하게 된 것이란다.

삼성은 미국 내에서 왜 텍사스 오스틴시에 부지를 잡았는가?

고급 인력의 채용이 용이해야 하고 장비 조달 및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또한 기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Austin에는 공대가 강한 University of Texas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전자업체가 인근에 있다. 따라서 전자산업 인력의 채용이 용이하고 이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재취업이 용이하므로 회사 지원자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전자업체가 모여 있으므로 제조장비의 조달 및 보수가 용이하다. 삼성반도체 공장유치를 위해서 미국내 6개주 20개도시가 후보지 유치경쟁을 벌였단다.

삼성측에선 오레곤, 달라스, 오스틴, 포틀랜드 등이 좋은 입지로 보고 있었단다. 삼성측은 20개 도시 입지여건의 손익계산을 해 본 결과, 10년간 투자 비용이 40억 불±2억불로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기업유치를 맡고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임 시장이면서 현재 기업유치 책임을 맡고 있는 Gracher Simmons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각 후보지 유치당국은 주 법률이 위임하거나 주별로 각기 다른 여건을 이용하여 손익계산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한다.

즉 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그에 따르는 기업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는 것이다.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등 20개 후보지중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곳이 있었는데 종합평가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부지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Utility의 지원과 세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혜택은 고급인력수급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해서 비교해본 결과, 결정적인 입지 선정요소는 아니었으며, 삼성은 고급인력의 수급과 인근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오스틴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스틴시의 경우에는 첨단산업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인가?

결과부터 말하면 삼성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한 만큼 지역사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공회의소 유치담당자들과 시청의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오스틴의 경우는 기업유치를 맡은 상공회의소가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기업에 유치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일단 유치가 결정되면 시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 시는 추가 부여한 법률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갖가지 다양한 시 차원의 지원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원 방안을 도모하고, 기업이 반대 급부로 지역에 기여하는 산출물과 비교 평가하여 결정한다.

삼성은 직원과 주민자녀를 위한 유치원을 설립하고, 반도체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400명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2000년경에 약 3000명의 고용인력 창출 등을 제시한다.

이와같이 삼성은 일반 고용조건과 교육 고용조건 등을 제시한다. 반면에 시는 각종 세금 인센티브와 3000명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확장을 약속하였다. 시청이 전력회사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장까지의 전선 인입선을 전력회사가 부담하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용수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업용수관로 부담을 수도회사가 하기로 하였다. 다만 가스는 지원의 수단이 될 수 없었는데 이는 가스회사는 민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스공급은 가스회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지원 방안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부, KOT-RA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열심이다.

미국도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한다. 이

는 다음 선거 등을 의식해서 더 그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선거직 지자체장이 가장 열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현재보다 더 경쟁적으로 일어나도록 제도의 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세금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국제보다는 지방세의 세금유인책 등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삼성이 시에서 떨어져서 땅값이 싼 곳에 공장을 건설해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출장을 간 여러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다. 시청판료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하였다. 아니라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잠시 돌아가자.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공장이 위치해야하는데 현재의 수도권 공장증설은 억제되고, 기존 공단 등으로는 수용할 능력이 없다.

각 반도체회사는 각자 결정된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하다가 보니까 땅값이 싸면서 수도권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한 곳은 전력, 공업용수,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정비되지 않은 곳이다.

이쯤해서 기업은 아우성 친다. 이렇게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외국은 부지를 거의 공짜로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면 지원이 안되고 있다. 이런 식이다. 산업단지공단 등의 반대입장은 이렇하다. 왜 하필이면 기존 공단을 놔두고 하필이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는가? 기존 공단이라든가 부지가 좀 비싸도 산업하부시설이 잘 정비된 곳으로가라는 것이다. 설명이 길어 졌다.

시청과 삼성에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았다.

공사와 관련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시청의 인허가 및 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법, 건축법 등에 근거한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합격이 되면 현장에서 삼성에 바로 결정 통보한다.

일명 FAST TRACK제도로서 공사 허가기간이 일반적인 경우 160일이 소요되나 동 제도로는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인허가를 받고, 이후에 공사를 착공한다.

미국은 공사진행 중에 단계별로 준 인허가를 한다. 그리고 공사준 공전에 공장가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단다. 이는 우리와 비슷하기는 하나 현지의 융통성과 재량이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미국에서의 공사는 광대한 황무지를 개발한다는 개념인 반면에, 우리는 좁은 국토로 인하여 모든 땅을 용도를 정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놓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금지로부터 시작되어 허가를 통해 완화된다. 미국은 모든 것이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을 금지로부터 시작하는데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차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차이까지를 논의하였다. 그곳은 공무원이 프로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달로 인해서 투명한 행정과 선거를 의식해서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다. 텍사스의 TV채널 중의 하나는 하루 종일 시 행정과 관련된 각종 회의, 공청회 등을 방송하고, 개인 또는 단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단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적 사고는 맑은 샘물과 같은 사회적 환경하에서 생기지 않을까 싶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최첨단 산업단지 에 손실이 크므로 정부에 대개 이를 애걸해달라고 할텐데 그런 요구가 없는가?

산호세시청 관료 Joseph R. Hedges가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요구한 기업은 없었던단다. 시청에서 알아서 해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도로를 넓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로를 확충하는 비용에 대해서 시예산이 부족하여 최근에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왔단다.

우리는 지자체가 정착되지 않은 중앙집중적 권력체제하에서 모든 것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예산의 부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상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원인자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통하는 사회였다.

우리는 시청에서의 만남을 끝내고 실리콘벨리 투어를 하기로 하였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전자회사의 간판을 보니까 반가웠다. 대부분이 반도체 판매법인들이었고, 현대가 일부 연구법인을 겸하고 있었다.

국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진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눈에 띄이지가 않았다. 인텔 본사를 스쳐 지나갔다. 펜티엄칩. intel inside. 앤디글로브회장……. 등등이 떠올랐다.

4. 전자제국 Nippon

일본의 첫 인상은 차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우리나라와 흡사하다는 느낌이었다. 몇 년후 한국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통상성과의 약속을 주선한 대사관의 박진천과장과 함께 통상산업성 환경입지국과 지역진흥정비공단(우리나라의 산업단지공단에 해당)을 방문했다.

일본의 첨단산업 입지정책은 83년 테크노폴리스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 학술공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조성추진하고, 지역에 첨단기술도입과 기존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시켜 기술을 핵으로 지역경제의 자립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통상성환경입지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6개 단지가 조성되어 자금과 세금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부 관련사항은 공단의 출장보고서 『첨단산업입지/유틸리티실태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에너지관련사항은 담당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5. 대기업도 육성하는 대만

우리는 경제부 공업국을 방문하였다. 대만은 컴퓨터부품과 주변기기의 세계시장 점유 1위. 이제는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였다.

94년에 시작한 반도체. 미국, 일본, 한국이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를 대만도 한단다. 그리고 화학공장도 세운단다. 왜냐하면 전자부품의 기초소재인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전자산업을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단다.

정부의 지원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무한정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단다. 섬뜩한 느낌을 느꼈다. 외환보유대국에 걸맞는 경제대국의 힘을 느꼈다.

대만도 자본집약적인 대규모 투자기업을 하는가?

흔히들 한국 경제성장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제한된 생산요소를 제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소기업보다는 소수의 능력있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왔다.

오늘날 산업의 불균형 성장, 부의 편재라는 업보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으로 오늘날 한국이 11대 경제대국 성장하게 되었다.

반면에 대만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이 산업의 기축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해 왔다. 이러한 대만의 기업문화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 조선, 화학프렌트, 반도체 등 한국식의 대규모 투자산업은 안된다고 학자들은 논문에서 써내려 갔었다. 그리고 각종 산업 정책보고서의 기저를 이루어왔다.

이제 그러한 논조의 글을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대만이 중소기업육성으로 축적한 역량으로 반도체와 화학산업을 한단다. 혼돈에 빠졌다. 세계적인 반도체저널인 DATA QUEST에서 세계의 반도체 시장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여서 공급과잉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부문에서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만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대만의 투자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유도 질문을 하였다.

우리는 경제부관리로부터 대만의 반도체투자는 정책적 실수라는 한마디를 듣고 자위하고 싶었다. 그러나 경제부관리는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것이다.

대만의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는 한 반도체 시장은 커질것이고, 세

계시장도 그렇다고 본단다. 가격 경쟁력은 걱정말란다. 우리는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다음 날 신죽 과학공업 원구를 방문했다. 대만은 촉진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신, 전자공업, 반도체, 정밀기기 및 자동차, 항공, 고급재료, 특용화학품, 의료보건 및 오염방지 등 10개 업종군을 집중지원하고 있었다. 동 단지는 79년 설치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6개 특별 첨단산업단지 중의 하나였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지는 분양이 아니라 장기 지가 임대로서 거의 공짜에 가까웠다. 전략적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단측이 모든 건축 인허가를 직접 처리하였다.

우리의 대덕과약단지와의 차이가 있었다.

대덕에는 연구소가 중심이고 교육기관으로 KIST가 있다. 신죽에는 청화대학, 교통대학이 단지 안에 있었고, 그에 더하여 굴뚝없는 공장이 있었다. 우리는 연구소 중심이고, 대만은 이에 추가하여 제조업체를 함께 유치하였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도 기입과 텍사스 유니버시티가 함께 있었고, 실리 콘벨리도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면서 배후에 스텐포드가 버티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생산은 주로 산업공단에 위치해 있고 연구는 대학

또는 기업의 연구소가 하게 되어 있어 연구와 생산의 고리가 약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와 생산을 동일 구역 안에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일 업종을 한 곳에 묶어 놓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외국과 같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재벌기업 간의 경쟁 의식으로 인해서 같은 지역에 동일 업종이 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은 이직이 훈장처럼 되어 있다. 실력이 있어 그 만큼 본인의 상품가치가 높아서 높은 가격으로 자신을 파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배신자로 또는 부적응자로 경시된다. 이러한 기업 문화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인력 시장에서의 유연성의 시너지효과보다는 평생직장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밖에 없다.

여하튼 공단과 연구단지내에 생산과 연구를 연계하는 점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대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대만인은 남에 대한 의심이 많다. 따라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기업의 중심이다. 부인도 직장을 갖고 있다. 다른 NICS 국가의 경우와 같이 여자의 취업률이 대단히 높고, 가정에서의 부인의 입김이 세다. 대만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여

자들의 참여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남자 1명이 벌어야하는 돈을 대만은 부부 둘이서 나누어서 버니까 더 많이 벌 수 있다. 기후가 온난하고, 이모작이 가능하여 먹을 것이 풍부하다. 따라서 식당이 발달되어 있어 그 수가 많고 음식값이 싸다.

아침은 대충 때우거나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사먹는 스낵이 발달해 있어, 사가지고 직장에 가서 먹거나 한다. 점심도 사먹고 저녁은 가족단위로 푸짐하게 외식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로 가족 중심의 기업을 하다보니까 유연성과 무한책임으로 인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이상의 종업원이 생기면 기업경영의 기법이 없어서 대단히 애를 먹는단다.

의심이 많기는 하나 합작정신이 강하여 한 번 외국과 합작을 하면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대만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합작을 하란다. 대만의 전자업체 그리고 신축공단에 입주한 반도체기업도 대부분이 합작이었다. 법의 자의적 집행이다.

기업이 잘하는 경우는 좀 어렵더라도, 탈세를 하더라도 봐준다. 그러나 기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만 열심히 하면 잘 살게 해준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

토가 조성되었다. 기업가 정신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기업인을 존중한다. 외국의 노동 인력을 활용한다. 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노동은 다른 동남아 국가의 노동력을 수입해서 쓴다. 반면에 대만인은 고급 업종에 종사한다.

대만과 중국은 어떤 관계인가?

대만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삼불정책(통신, 왕래, 통상)을 버린 지 오래다.

그리고 홍콩이 반환되고 정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가장 큰 외국 투자는 바로 본토이다. 왜냐하면 말이 통한다. 문화가 같다. 이것이 가장 큰 투자여건이다. 그러면서 대만인은 우리나라에 충고한다. 대만이 중국 본토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왜 남한은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가?

대만도 독재체제에서 민주화하면서 민주화 비용을 지르면서 경제가 주춤거릴 것 아닌가?

답은 NO란다. 대만인은 정치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많다. 국민당 자체가 재산이 많다. 국민당이 기업을 갖고 금융지원을 한다. 의심이 간다. 정경유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경제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기업은 하기 어려워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왜 대만은 그러하지 아니한가? 숙제가 또 생겼다.

6. 뒷풀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산업보다 우선하되 세금 등의 인센티브를 통한 차별적 지원이 있었고, Utility의 경우 사업주체가 국영, 민영에 따라 다르고 용지, 용수, 전력 등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이 각기 상이하였다.

전반적인 지원내용은 미국은 주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오스틴의 경우는 삼성에 한해서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기업별 차등지원 혜택이 없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동일한 척도로 지원이 되고 있었다. 원인자 비용부담원칙, 비용/효용원칙이 지원컨셉의 중

심을 관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산출물이 많았기 때문에 오스틴시도 삼성에 대해 혜택의 폭이 컸다.

다른 유치기업의 경우에는 삼성에 준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고용 및 교육효과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란단.

전력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보고 들은바는 다음과 같았다.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 대만보다 저렴했다. 배전선로의 설치에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있다.

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지원 시책상 Utility 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이 경우에 더 많은 반대 급부를 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이고 이 경우에도 전력사업을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한전의 전국 독점하에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어떤 기업, 어떤 지역, 어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특혜의 소지가 있고 누구나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다.

더구나 재벌들이 하는 반도체산업이라는 특별한 산업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차보조측면에서 볼 때 전기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Utility 지원만을 각국별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로 보였다.

그리고 공단의 전력간선설비를 한국전력공사가 100%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설비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았다고 보였다.

간접투자설비인 전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